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 균형발전 촉진 정책의제 발굴 협력 강화

시도지사협, 시도연구원협의회 등과 협약 체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함께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협의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 실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업무협약과 좌담회에 이어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포럼에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각각 강소권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정책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 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강원, 제주 및 전북 등과 같은 지역을 강소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출된 정책의제들은 오는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책포럼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정책의제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수소차 충전소 태부족

두세훈 도의원 "14개 시 · 군에 조속히 설치해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혁신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 내 수소차 보급률에 비해 수소차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14개 시.군에 조속히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는 849대의 수소차 중 현재 수소충전소가 있는 전주(495대), 익산(160대), 완주(113대) 지역에 도내 수소차의 90%가 집중됐다. 또한, 충전소가 없는 시 · 군은 절대적으로 수소차 구매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북도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은 9번째이고, 수소차 보급률도 7번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수소차 충전소 1개소당 전북은 307대의 수소차를 감당해, 부산 626대, 서울 549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충전소를 조속히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을 비롯해 권역별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인천(273대), 강원(302대), 울산(244대), 경북(33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전소 1개소 당 감당하는 차량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이에, 두 의원은 "전북도가 대한민국 수소 1번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정작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도내에는 전주, 완주, 부안군 만 수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고, 전주시(4명), 완주군(5명) 외에 12개 시.군이 수소 담당자가 1명씩에 불과해 도의 의지에 비해 시 · 군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세훈 의원은 "도내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등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각 시군별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 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아동 정서학대 급증… 대책 수립해야

지난해 504건에서 지난 9월 말 499건으로 20% 이상 증가 예측

황영석 부의장 "학대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강화 필요"

아동학대가 지난 2019년 1,720건에서 2020년 2,086건, 2021년 9월말 1,519건으로 증가추세이고, 특히, 정서학대가 2020년 504건에서 2021년 9월말 499건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황영석 도의원(부의장, 김제1)의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밝혀졌다.

황 의원은 "학대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부모와 조부모 등 사실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조치결과에서는 피해아동은 원가정 복귀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더라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379회 임시회(3월 3일)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전담팀 조직과 개방형직위 약속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를 어기면, 도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 신뢰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전문성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김대오 도의원 "교통약자 차량 요소수 안정 공급책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복위 · 익산1)은 11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에 대한 요소수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수급 대란이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와 전북도는 컨테이너 화물차 등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보니, 아동 · 장애인 · 노인 등 '교통약자'용 차량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약자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휴 · 폐지 법인어린이집 시설 전환책 서둘러야

이명연 도의원, "도내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50% 이하"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50% 이하의 어린이집 71개소 중 35개소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도의회 이명연(환경복지위원장, 전주11)의원이 11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전북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1개소를 정원충족률에 따라 '0~30%' 이하의 법인어린이집은 12개소, '31~50%' 이하는 23개소, '51~70%' 18개소, '71~100%' 18개소로 정원충족률 50% 이하의 법인어린이집은 35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대상 다양한 사업 추진 시 폐원 위기 및 휴 · 폐지한 법인 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하고, 전북도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및 다양화 등)에 의한 법인 시설 전환과 더불어, 기초단체와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경우 외국국적 유아학비에 대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과정비를 모두 지원하며, 공립유치원은 1인당 156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39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들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명연 의원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조제1항에서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면서 "특히, 실시계획에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는 물론, CCTV보급 등의 사업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예산으로 표기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다"라고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과도한 감사, 사회 흐름 해치는 것"

교육위, 군산교육문화회관 감사건 관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1일 전북도교육청의 6개 관 · 6개 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사업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안하는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받았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다"며 "공문서로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지양하고, 간단한 절차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군산교육문화회관의 감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징계를 받은 직원 중 부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있다면, 제대로 바로잡힐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 감사가 아닌, 징계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감사관실의 행위가 감사과 직원들의 권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군산교육문화회관의 사안에 대해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감사는 사회흐름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의구심 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경위 "군산조선소 재가동 적극행정해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1일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9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중이 40%를 충족하는 위원회는 단 1개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제조업에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주조분야 종사자가 전년대비 약 50%가 감소하고, 농 · 건설기계사업체는 20%가 감소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업유치와 분양현황 활동에 대해 독려를 요청하고, 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별 운영수입과 이용객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안모색을 주문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4년동안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와 직결되는 큰 현안으로, 세계적인 조선경기 호황기에 잘 대응해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환복위 "군산의료원 정규직 전환 미이행"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1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전북도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종사자 위급시 안전망 구축 현황에서 기관별로 상이해 CCTV, 비상벨, 경찰지구대 연계체계 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종사자는 물론 이용자, 생활인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미비한 기관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근무환경개선, 임금 체계변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 직영 운영으로 전환돼 흑자운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체계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북도 차원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내년도 노인 급식단가 상향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급식단가 차이를 지적하면서, 전북도가 노인무료급식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문건위, 창의예술교육 랩 연구진 인사문제 지적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은 11일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TF팀을 구성, 여러 차례 회의까지 했으나 갑자기 중단된 사실에 대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지인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에 주려고 했으나 그게 되지 않자 조사의 중복과 예산 부족의 사유로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장애 예술인 실태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관광재단 창의예술교육 랩 연구진이 예술과 관련이 거의 없는 문예진흥본부장의 지인들로 구성돼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예진흥본부장이 부산의 한 카페의 대표자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 인사규정에 겸직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 "갈등조정자문위 적극 갈등 중재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1일,제386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항공대대 소음, 예비군 대대 이전 등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도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청광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광장을 새롭게 정비했지만, 잔디광장에 출입을 금지해 도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은 대규모 부지를 바라보는데만 그치는 등 전보다 이용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도청광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활용가능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도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